

토론요지 2

김 찬 배 사무관 (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담당)

- 각각의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충남형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충청남도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
 - ▶ 제안사항을 ① 주민자치역량 강화(교육), ② 추진주체 활성화(힘 실어주기) ③ 법·제도의 정비, ④ 민·관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

1. 주민자치역량 강화(교육) : 「충청남도 주민자치 아카데미」 추진

<추진 현황>

- ▶ Pre - 주민자치 아카데미 : 2회 (2013. 1~2월) / 15개 시군, 630명
- ▶ 시군별 「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」 : 15개 시군 (2013. 4~12월)
 - 천안(4.11), 서산(5.22), 청양군(5.30), 공주·금산(6월), 아산·당진(7월), 서천·예산(10월), 논산(11월) 등
- ▶ 道 공무원교육원 (3개 과정 / 총 3,150명 대상)
 - 작년도 시범운영 (각 1회) / 2013년도 정규과정 편성, 본격 추진

과 정 명	대 상	횟수	주 요 내 용
지방분권 촉진과정	전직원	2회 (4,9월)	지방자치와 지방분권정책의 발전 방향, 지역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방안 모색 등
동네자치 활성화 과정	전직원 道 民	3회 (3,5,9월)	동네자치 현황 및 해외사례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, 마을만들기 우수사례
도정 핵심 사업의 이해	전직원	10회 (연중)	행정혁신, 3농혁신, 자치분권, 사회적 경제 등

<향후 계획>

- ▶ 주민자치 시범사업 컨설팅 : 「주민자치 모델사업 발굴·육성」과 연계
 - 시범사업 참여주민 및 유관 단체 대상, 쏠과정 전문가 지도·컨설팅
- ▶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추진 (계획중)
 -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사업 지속 추진과 연계, 맞춤형 현장 컨설팅

2. 추진주체 활성화 (힘 실어주기) : 「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사업」 발굴·지원, 주민자치 공동체 기반조사, 「충청남도 주민자치 연합회」 출범 등

① 「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사업」 발굴·지원

- 주민자치사업 의제 발굴 토론회 (2012. 11월 / 15시군 담당관)
- 주민자치사업 제안서 접수 : 49건 (2012. 12월 ~ 2013. 2월)
- 제1차 주민자치 시범사업 선정 : 4건 (2013. 4월)

❖ 안전행정부 「주민자치회」 시범실시 공모 ('13. 5. 7)

- ▶ 우리道 24개 읍·면·동 신청 (전국 3위 : 경기 38개, 광주 33개)
- ▶ 시·도별 2개소 선정, 응모건수에 따라 추가 배정 (5월말까지 예정)

⇒ 제2차 주민자치 시범사업 선정 : 4건 (안행부 시범실시와 연계)

- 안행부 未선정사업 중, 차상위 우수사업에 대한 道 자체 지원
- 주민자치아카데미와 연계, 마을별 밀착 컨설팅을 통한 모범사업 육성

② 주민자치 공동체 기반조사

- 기본현황 조사 (2013.3월~5월) 및 아카이브 구축(하반기)
- 민·관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체계 구축
- ※ 충남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(2013. 6월~10월)

③ 「충청남도 주민자치 연합회」 출범

- 시·군별 주민자치 연합회 구성 중
(주민자치센터 未설치 읍·면동 → 주민자치위원회 先구성 유도)

❖ 「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」 구성 현황

- ▶ 광역 시·도 : 4곳 (대구, 인천(법인), 충북, 제주(조례))
- ▶ 道內 시·군 : 6곳 (천안시, 보령시, 아산시, 금산군, 홍성군, 태안군)

2009년	2008년	2011년	2010년
2006년	2011년	2007년	2012년
			2010년
			2011년

⇒ 충청남도 주민자치 연합회 구성, 출범식 실시 (하반기 예정)

④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

- 문화·여가 프로그램 위주 운영 지양 → **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화**

- ▶ 주민자치센터 설치율 ('12년말) : 전국 78%, 우리도 82%
- ▶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율 ('12년말) : 전국 6.3%, 우리도 13.5%

3. 법·제도의 정비 : 「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 조례」 제정 등

- ▶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차원의 추진체계 구축
-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전문가·도민 등으로 구성된 「충청남도 지방분권협의회」 설치 → 정책과제 발굴 및 주민참여방안 마련
- ▶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연계,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확대·개편
- 위원회 확대·재구성 : 여성, 학생, 소외계층 등 참여 권장
- ▶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
- 「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표준조례안」 마련 지속협의 중
- 시범실시 후 「주민자치회 일반법」 제정 시, 도(시·군)의견 적극 반영
- ※ 조직·예산 등 전국 공통적 행·재정 지원사항을 법(조례)에 명시토록 건의, 그 외, 시군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지원방안 별도 마련 추진 예정

4. 민·관 거버넌스 구축 : 자치분권의 외연 확대

- ▶ 시민사회활동 지원 간담회 (2013. 2~3월 / 6차)
- 정책자문위 참여소통활성화기획단, 한국NGO학회, 공무원 등 실무팀 구성
- (가칭)충남 시민재단 설립 추진방향,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국 연대방안 등 논의
- ▶ 민·관 협력 정책컨퍼런스 (2013. 4.12)
- 한국NGO학회,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, 부산시민센터, 한겨레신문 사회정책연구소 등 100여명 참석
-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정책, 지역재단과 중간지원기관 설립방안 연구 등 논의